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바로 뛰며, 현장 느낄 것”

이재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1일 취임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박재완 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취임한 이래 8개월여 만에 다시 수장이 교체됐다.

이재필 장관 내정자는 소아마비의 장애를 극복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영남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외에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과장, 산업안전국장, 고용정책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안전검사 결과서 신설

앞으로 위험기계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위험기계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에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 검사 결과를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해 보존(3년)토록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안전검사결과서’에는 검사내용은 물론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기준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에 편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려주어 신청자인 사업주는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 검사원에 따라 결과 판정이 임의적으로 달라질 가능

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위험기계에 대한 사업장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원심기, 사출성형기,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는 약 17만 대에 달한다.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 발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생애, 그리고 사업주의 경영생애 별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필)는 6월 10일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각 기관과의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즉, ‘배움단계’, ‘입직·창업단계’, ‘근무·사업단계’, ‘생활수단단계’ 등의 생애주기별로, 안전보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

배움단계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일하기 전부터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예비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등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에 포함,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입직·창업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보건 자료를 보급시켜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근무·사업단계에서는 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을 서비스업에 맞게 조정하고,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생활수단단계의 경우 10대 재해발생 직종에 대한 열까지 수칙 정보인 ‘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이 적극 추진되고, 계절 및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도 지속 개발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심일터 추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물론 직능단체와 민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TF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에서 8월까지를 산업현장 질식사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5월 31일 발표했다.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은 △작업전과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과 작업중 환기시설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이번 수칙발표와 함께 공단은 집중관리기간 동안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줄 방침이다.

또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50%~80%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안전장비 대여나 장비구입 비용 지원은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선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의 경우 평년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어느 때 보다도 밀폐공간 질식사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작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여름철 밀폐공간에서는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관련 재해사망자는 37명으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18명이 6월에서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장소별로는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맨홀 9명, 저장탱크나 화학설비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한국경총 ‘산재예방’ 위해 뭉쳤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11 노사참여 안전·보

건 개선활동’ 사업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은 노·사가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동업무 추진을 계기로 이와 같은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0%,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90%가 발생하고 있는 현 산업계 상황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경총, 안전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 공동협력사업인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 활동사업’을 12월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은 누구보다도 현장 근로자가 잘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연구실 사고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은 중대 연구실 사고를 ‘사망 1인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 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매월 1시간에서 반기 6시간으로 조정(사이버교육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도엽 장관 “사고 발생 시 책임 확실히 물을 것”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권 신임 장관은 6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안전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언급하며, 사전에 철저한 예방체계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안전사고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대외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4대강, KTX, 건설, 교통 등과 관련한 현장에서는 사소한 고장이나 실수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